

제 3부 학교교육 체제와 방향

8.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누리과정

-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5공화국 정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1986년 의 유치원 수는 1980년보다 11배 이상 늘어나서 전국에 1만 여개, 취원율은 54% 수준으로 양적인 비약이 나타났다.

유아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

-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 실험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고용과 연소득은 물론 범죄율에서도 낮은 성향을 보였다. 반면 IQ같은 인지능력의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장기적으로 인생을 바꾼 요인은 성실함, 사교성 같은 비인지적 능력이었다.
- 가난한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반대로, 불우한 환경에 놓인 영유아들이 부모와 교육 및 보육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인지 능력, 사회, 정서적 능력이 모두 부족하여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영유아(0~5세)	유아(만 3~5세)
소속	보건복지부	교육부
목적	보육중심	교육중심
교사	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	교사(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수업 일수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180일 이상
운영 시간	종일제(12시간), 야간보육	반일제(3~5시간), 시간 연장(5~8시간), 종일제(8시간 이상)

누리과정: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의 유아들에게 적용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국가표준 교

육과정을 의미한다.

-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선하였다.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반영한 인간상으로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 셋째, 내용 구성의 간략화를 통해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교육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였다.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

- 유치원 선생님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왜 필요할까

- 그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었다기보다는 근시안적이며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최근까지 유아교육에서는 무상공교육화 실현을, 유아보육은 민간 의존적인 보육의 탈피와 전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각각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유보통합은 공교육 체계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보통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추진될 가치가 있다.
-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에는 격차가 존재하고,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기(만 3~5세) 아동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 둘째, 이원화된 행·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여 유보 행정·인력·예산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셋째,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자격 및 처우를 일원화하여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균등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며, 학부모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은 두 기관 간의 환경과 운영의 차이를 없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향후 쟁점과 이슈들

- 유아교육이 향후 기간학제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현되어야 할 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 유아 교육의 신뢰성 제고, 거버넌스 영역의 과제로서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의 이원화 및 교사 전문성 질적 제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확대, 제정지원 강화 등을 향후 주요한 쟁점과 이슈들로 보았다.
- 위와 같은 쟁점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부모 부담 비율 축소 및 실질적인 무상화가 필요하다. 2012년부터 모든 계층에 유아교육비를 제공하는 누리과정의 추진으로 학부모 재정 부담 경감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강화되어 재정적 측면에서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따라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무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수준을 고려하되,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재정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방안이 필요하다.
- 둘째, 유치원 K-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정착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사항 및 회계 교육, 에듀파인 기능교육, 인력, 연수등이 필요하다.
-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넷째,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을 40% 정책 목표의 이행이 요구된다.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추가 등을 통해 현재 27%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정책적 과제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의 전제 조건이자 성공의 지표가 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교사 및 학부모의 태도, 관점 등의 전환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양성체제의 이원화 및 교사 전문성의 질적 제고, 유보통합의 실현, 유치원의 기간제화 실현,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등의 장기적 과제들이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9. 고등학교 체제의 이해와 개편 논의

10. 영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대입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교육기관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즉 과도한 입학경쟁 및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균형 심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영재교육 분야가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를 포괄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가 영재인가: 영재는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 ‘영재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주로 높은 지능과 같이 ‘타고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였지만,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영재성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발되는 능력’으로 보게 되면서, 개인의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영재교육인가

-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 ②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역사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선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국가나 교육기관이 설정한 기준으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수요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선발체제 정립’ ‘영재교육 진입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둘째,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영재교육기관이나 교육기관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영재교육종합포털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이를 통해 재능 발굴부터 성과 관리까지 영재교육의 전 단계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고, 영재교육의 성과 분석을 위한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를 총 25년간 (2017~2041년)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이 수립된 이후로 만들어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들 체계를 살펴보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재학급은 각급학교에서 방과후나 지역공동 운영 체제로 운영하며,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 등에서 주1회, 방과후, 주말,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학과 과학·예술을 공부하기 위한 총 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어떻게 다른가

-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로, 교육과정상 ‘무학년제’ 학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과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로, 교육과정상 학년제를 운영하여 2년 조기졸업이 간오하고,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① 교과 ② 창의·연구활동 ③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는 총 144학점으로, 인문계열 교과(60학점), 자연계열 교과(76학점), 융합과목(8학점)으로, 창의·연구활동은 창의기초연구(6학점), 소집단 자율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16학점), 졸업연구(8학점)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중심 리더십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활동, 협업활동, 세계시민 활동으로 편성하여 3년간 총 3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되, 영역별로 최소 6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재교육, 그 미래는?

- 영재성의 개념이나 기준도 분명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기준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등은 지금과 같이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영재교육의 목적과 효과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재학교의 경우, 일반고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인재들이 이공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향후 종단연구나 추적 조사를 통해 그 답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별도의 정규 영재교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재능을 보이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풀-아웃(pull-out)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평범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적 성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덜 효과적인 것일 까, 혹시 우리는 더 효율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을, 그리고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방향성은 영재학교에 대한 사회적 쟁점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영재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

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책무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갖고 있고, 영재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영재교육의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11.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 대학입학정책의 방향

- 근래 들어 대학입학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 사이 대학은 계속 늘어나서 이제 대학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역전되었다. 이제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보다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대학이 더 많다. 대학입학제도 운영에 관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입학제도 운영의 논리

- 대학입학제도는 대학교육을 받을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교육 현실이 변하고 정책 문제가 바뀌면 제도 운영의 원칙도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 입학제도 운영의 원칙 역시 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전반기 사이에서 고등교육이 대중교육 단계로 진입하였고, 1990년대 초·중반에 보편교육 단계에 접어들었다.
- 1980년대까지, 즉 엘리트교육 단계에서 대중교육 단계로 막 이행한 시기에는 대학 입학 경쟁이 무척 치열하였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제고, ③ 사회 통합 강화 등을 대학입학제도 운영 원리로 들었다.
- 1990년대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되었고, 2000년대 말부터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필두로 대학마다 독특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에 과외 금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로 사교육비 증가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사교육비 완화가 대학입학제도 운영의 원칙이 되었다. 이런 방향에서 수능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교육방송(EBS) 교재에서 수능 문제 일부를 출제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학이 적격자를 선발하고자 하면서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경험을 전형 요소로 추가하게 되자, 학생들 사이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 즉 인맥에 상당히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의 인맥이 넓은 가정에서 자란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가 넓어진 반면, 부모가 생업에 바빠서 자녀의 학교 밖 경험을 챙겨주지 못하고, 여러 대학의 다양한 입학 방침에 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불리함을 겪게 되었다.

- 정시 비중이 줄고 수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이 줄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고교 학생부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대학이 그 기록을 평가하는 과정까지 주관성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근래는 공정성이 대학입학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대학입학정책 문제의 전개와 변동

- 대학입시정책의 전개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본고사 중심의 대학자율입시 운영기 (1945 ~ 1980)
 - ② 국가 주관 시험 중심의 국가 주도 입시 운영기 (1981 ~ 2008)
 - ③ 고등학교 산출 기록 중심의 대학 자율 입시 운영기 (2009 ~ 현재)
- 고등학교 산출 기록 중심의 대학 자율 입시 운영기(2009 ~ 현재)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문을 열었다.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 시험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응당 해야 할 경험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이니,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낮추되 고등학교에서의 학업과 생활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을 강화하고, 그밖에 다른 전형 요소 활용도도 높이자는 것이 정책 취지였다. 이렇게하면 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과 같은 시험 점수 반영 비율은 낮추되 시험 성적이 아닌 다른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을 높여서 전형으로서의 타당성과 적격자 선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대입시험 경쟁완화를 기대한 것이다.
- 이런 방침은 대학과 고교 양쪽에서 환영받았다. 대학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 받았다. 고등학교에서 산출하는 기록이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되면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1990년대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이 증가하면서 고교 평준화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정책을 시행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명확해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부 산출과정과 대학에서의 학생부 활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면서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입학전형 자료와 공정성

-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원칙임을 상기하면,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별 전형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별 전형을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본고사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교육은 파행 그 자체였다. 또

한 대학별 전형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고, 대학의 입시 부정이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다. 2000년대 이후로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별 전형 확대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별 전형 자료나 고등학교 기록에 비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발전된 학력고사’로서의 성격을 띠며, 암기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고차적 사고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점에서는 현재의 수능이 학생 선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수학능력 적격자 선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수능시험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고차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능이 점차 단순한 사고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암기 위주 학습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과외가 합법화 상황에서 질 높은 학원 강의를 듣는 것과 수능 성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인되면서 과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고교 내신 자료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형 요소다. 고교 내신 자료는 수능시험과 대학별 전형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와 시험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본연의 활동을 반영하는 전인적 평가 자료의 특성을 지닌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운영된 2000년대말 당시에는 학교안에서의 활동 외에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기록하였으나,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스펙 쌓기 경쟁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래는 학교 내의 활동 기록만을 기재하고 있다.
-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잉 기재, 부실 기재, 학생 직접 기재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설 입시기관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주는 일도 있으며, 대학에서의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실 평가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 수능 시험 성적은 공정한 것이고,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고액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잘 풀고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 역시 높은 성적을 올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능시험 역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온갖 부실과 부조리 가능성에 비하면 더 감내할 만하다고 인식할 뿐이다.

고등교육의 변화가 가져올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 이제는 대학입학을 원하는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전입시대가 개막하였

다. 대학전입시대에는 대학의 선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 첫째, 대학입시정책에서 대학 진학 희망자들의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문제로 제기된다.
- 둘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연령이나 출신 국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여러 줄로 선발 또는 모집하여 교육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개별 대학별로 독특한 학생 선발정책을 만들어 가는 일이 국가수준의 입시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셋째, 학생을 선발하는 소수 대학의 전형 방식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이상 공정성은 전형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학생부 중심 전형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평가의 기본을 조속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부 산출과정과 평가과정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선발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 주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왕 시험을 치를 것이라면, 수능시험을 통하여 학생의 고차적 사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근래 논의되고 있는 논술형 수능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험 준비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다면, 학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유형의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선발 대학이든 모집 대학이든 미래 사회에 활약할 잠재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그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대학은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든 대학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